
‘폭발’에서 재건 프로세스까지 : 칠레 사회의 새로운 무대

마누엘 안토니오 가레톤 M.

칠레대학교 교수

원제와 출처: Manuel Antonio Garretón M., “Del “estallido” al proceso refundacional. El nuevo escenario de la sociedad chilena”, VV. AA., *Universidad pública, crisis y democracia*, Santiago: Editorial Universitaria, 2021 / *Asian Journal of Latin American Studies*, Vol. 34, No. 2, 2021, pp. 39–62.

핵심어: 칠레, 재건 프로세스, 개헌 국면, 사회적 폭발, 시대 교체

초록

이 글은 사회경제적 모델의 위기, 사회 행위자와 제도 정치 간의 관계 파탄을 특징으로 하는 칠레 사례에서 소위 말하는 결정적인 정세와 재건 국면에 대해 살펴본다. 이 위기는 2019년의 이른바 사회적 폭발과 함께 분출되어, 정치 행위자들이 그 해결책으로 합의한 ‘개헌 국면’으로 귀결되었고, 이 국면은 국민투표로 시작되어 개헌회의 선거로 이어졌다. 개헌 국면의 가장 큰 의의는 독재정권

이후의 민주 정부들에 의해 부분적으로만 수정되었을 뿐인 피노체트 군사독재 헌법의 종식이다. 이 글은 칠레의 사회적, 정치적 위기에 대한 응답인 재건 프로세스가 과학기술 혁명, 생태 위기, 반가부장주의 및 문화 다양성을 위한 투쟁, 자유민주주의의 위기, 작금의 코로나 팬데믹 같은 세계 차원의 시대적 변화들과도 얽혀 있다고 주장한다. 비록 이러한 위기가 전 세계적으로 전개되고 있지만, 칠레 사례는 강력한 사회적 동원과 새로운 제도적 틀에 입각해 이 위기의 역사적 제 문제를 해결하고 극복할 수 있을지도 모를 만큼 특수성을 띠고 있다는 것이 이 글의 결론이다.

서론

칠레는 이미 수십 년 전부터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모델의 위기를 겪어 왔다. 급기야는 2019년 10월의 ‘사회적 폭발’(estallido social)로 위기가 최고조에 이르렀고, 그해 11월 제도적 출구 마련을 위한 정치 세력들의 합의로 개헌 프로세스가 시작되었다. 이 프로세스는 2020년 10월의 국민투표로 시작되었고, 개헌회의 주도의 신헌법 제정이 대다수의 찬성으로 결정되었다. 그러나 개헌회의 선거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두 차례 중단되었다가, 2021년 5월에 드디어 실시되어 동년 7월에 개헌회의가 구성되었다. 2019년 사회적 폭발 때 표출된 사회적, 경제적 위기는 팬데믹이 야기한 위기와 얽혀 있지만, 양 위기는 기후 위기, 디지털 사회 혹은 통신 사회의 도래, 가부장 사회의 극복 모색, 정치 위기 등을 특징으로 하는 다차원적 시대 교체라는 공통분모를 지니고 있다. 이 모든 것이 앞서 언급한 제도적 출구에 재건 국면이라는 특징을 부여하고 있으며, 우리가 이 논문에서 다루고자 하는 바가 이것이다.

2019년 10월 사회적 폭발의 이중적 의미

2019년 10월 지하철 요금 인상으로 비롯된 일련의 군중시위가 일어나 수개월 동안 되풀이되었다. 그러는 동안에 폭력사태와 이에 대응하는 당국의 체계적인 인권 유린도 여러 차례 발생했다. 전국적으로 일상적 활동이 마비될 지경이었다. 규모, 요구의 다양성, 다양한 행동이라는 측면에서 처음으로 지지 정당이나 사회단체의 지휘에 따르지 않는 최초의 시위였다. 물론 21세기 들어 이 대규모 시위의 전례들이 있었다. 2006-2007년에는 중등교육 과정 학생들과 하청계약 근로자들의 대규모 시위가 있었다. 교육, 영토, 환경 문제로 시위가 끊이지 않았고(특히 2011-2012년의 대학생 시위가 규모가 컸다), 2018년에도 여성운동 시위가 있었다. 요컨대, 정치 성향에 따른 것이 아니라 해당 분야의 조직에 집중하는 리더십을 특징으로 한 시위들이 사회적 폭발로 이어진 것이다. 2019년의 사회적 폭발은 규모도 규모지만, 정계나 특정 사회단체를 배경으로 한 조율자가 없어서 당국이 대화 창구를 가늠하기 어려웠다는 점에서 특수성을 띤다.

민중 소요, 반란 등으로 부를 수도 있을 사회적 폭발과 그 여파에 대한 다각도의 논의와 연구로 미루어볼 때(De la Fuente-Mlynarz 2020; Ruiz Encina 2020; Mayol 2019; Araujo 2020; Alé, Duarte y Miranda 2021; Garretón 2021), 사회적 폭발과 그 결과는 이중적 의미를 띠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 의미는 청년들의 욕구라든가, 상승한 기대치에 못 미치는 현실에 따른 신흥 중산층의 좌절이라든가, 반체제 집단 혹은 그저 범죄자들의 조직된 폭력 등으로 현 사태의 의미에 몰타기를 하는 혼해 빠진 논평들과는 거리가 있다. 우리가 보기에, 사회적 폭발은 한편으로는 군사독재의 유산인 사회경제 모델의 정당성 위기이다. 이 모델은 중도파와 좌파 연합 민주 정부들에 의해 일부 수정되어, 다양한 사회 계층, 특히 중산층과 서민층의 물질적 조건들이 개선된 측면은 분명 있다. 그러나 배제와

불평등, 부채와 불안정, 두려움과 불확실성, 부와 경제 권력의 심각한 집중 및 정치와 다양한 사회생활에 행사하는 그 영향력이라는 대가를 치러야 했다(Garretón 2012). 또 다른 한편으로, 제도권 정치와 그 주역들의 정당성이 상실되었다. 즉 칠레 역사에서 최소한 20세기 전반기부터 국민의 요구 및 염원의 표출 통로였던 정치와 그 주역들이 더 이상 그 통로가 되지 못하게 된 것이다(Garretón 2014). 이 두 가지 측면이 전횡(abuso)에 직면해 분노와 무력감을 느낀 주체들을 형성해 왔다. 권력의 전횡이 심각하다는 일반적인 인식이 지배 엘리트에 대한 폭넓은 거부, 제도에 대한 정당성 부여 철회, ‘존엄성’으로 집약되는 대중의 절규로 나타났다.

2018년 3월 출범한 세바스티안 피네라(Sebastián Piñera) 정부는 이 두 가지 위기를 극단으로 몰고 감으로써 이들을 격양시켰다. 집권 초기 몇 달 동안 그의 담화와 조치들은, 여러 분야에서 ‘더 나은 시대’(tiempos mejores)¹⁾를 예고하는 과도한 약속을 하는 한편, 미첼 바첼레트(Michelle Bachelet) 전 정부가 칠레 모델에 도입한 부분적이지만 의미 있는 개혁들의 철회를 겨냥했다. ‘더 나은 시대’ 공약의 불이행, 비판과 절규를 외면하고 개선장군인 양 던지는 그의 메시지는 결국 여론의 거부감을 야기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지하철 요금 인상이 사회적 폭발과 시위의 기폭제가 되었다. 대중교통 문제가 기폭제가 되는 일은 근래에 세계적으로 많이 있었다. 이는 아마 대중교통이 일상의 여러 문제를 공간과 직접 연결시키고, 공공재의 일상성과 정치성이 매우 높기 때문일 것이다. 칠레 경우에는 요금 상승(alza)이 사회적 폭발의 상징적 주도 동기(leitmotiv)가 될 ‘개찰구 뛰어넘기’(saltar el tornique)라는 권리의 ‘전횡’으로 비화하기까지 했다. 지하철역에 난입하고, 개찰구를 무력화시키고, 무임승차를 부추긴 청년들의 행위는 앞으로 다가

1) 피네라의 대선 때 슬로건(약주).

을 사태의 상징적인 개막식이었다. 수 주간에 걸쳐 수도 산티아고를 비롯한 모든 지역에서 매일 시위가 벌어졌으며, 어떤 경우들은 칠레 역사상 가장 많은 시위자가 참여했고 요구 사항도 다양하기 짝이 없었다. 시민의 요구는 단순한 가두행진이 아니라 새로운 시위 형식들을 수반하며 표출되었다. 그 예로 특히 시민이 자체 소집한 의회(asamblea)와 주민회(cabildo)들을 들 수 있다.

제도권 정치와 부유층은 칠레 국민 사이에 커다란 불만이 존재하고, 그럴 만한 객관적인 원인도 있다는 점까지는 알았다. 그러나 최근 수십 년간에 걸쳐 사회 전반에 스며든 불공정과 전횡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는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그리하여 초기에 당혹해하기만 했을 뿐 특별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고 반응도 제각각이었다. 그들은 파괴적인 폭력 행위들이 발발하고 나서야 응답하기 시작했다. 응답이 늦다 보니 시민은 이를 대대적으로 거부했는데, 역설적이게도 그 응답은 시민의 요구들이 수용된 것이었다. 실제로 가장 큰 폭력이 발생한 날 밤에 정치적 합의를 모색하겠다는 발표가 있었고, 2019년 11월 15일에 여권 정당들과 중도 및 좌파 정당들, 그리고 ‘광역 전선’(Frente Amplio) 일부가 포함된 대부분의 야권 세력 사이에 합의가 도출되었다(다만 ‘광범위한 전선’의 또 다른 일부와 공산당은 참여하지 않았다). ‘사회적 평화와 신헌법을 위한 합의’(Acuerdo por la Paz Social y Nueva Constitución)란 이름의 이 합의는(Biblioteca de Congreso Nacional 2019 참조), 비록 시위 진영의 일부 주요 세력에 의해 거부되긴 했지만, 부분적으로나마 갈등의 물길을 개헌 프로세스라는 제도적 출구로 향하게 했다.

고삐 풀린 개헌 프로세스

개혁적인 개헌을 골자로 한 상기 정치적 합의는 독재정권이 만들고 민주 정부들이 부분적으로 수정한 헌법을 대체할 새로운 헌법을 위해 먼저 ‘입구’ 국민

투표(plebiscito “de entrada”)를 계획했다. 개헌 찬반과 개헌 기구의 형식을 묻는 국민투표였다. 개헌 방식에는 ‘국회의원과 시민대표 혼성 회의’(Convención Mixta de parlamentarios y ciudadanos)와 사실상 제헌의회(Asamblea Constituyente)에 해당하는 것으로 전원을 새로 선출하는 ‘개헌회의’(Convención Constitucional) 두 가지 선택지가 있었다.²⁾ 이 과정을 거쳐 마련된 헌법은 의무투표³⁾ 방식의 ‘출구’ 국민투표(plabiscito “de salida”)를 통해 통과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었다. 2019년 11월 15일 정치권의 합의 이후, 개헌 기구의 남녀 동수 구성과 선주민 의석 보장, 개헌회의 선거에서 무소속 출마와 무소속 후보자 명부 작성에 대한 편의⁴⁾ 제공이 추가되었다.

2020년 4월 첫 번째 국민투표와 더불어 시작될 예정이던 이 프로세스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말미암아 연기되었다. 이는 두 현상의 대단히 상이한 본질, 특수성, 역학에도 불구하고, 서로 긴밀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1차 국민투표는 2020년 10월 25일에 실시되어 78%가 신헌법 제정, 79%가 전원을 새로 선출하는 개헌회의에 찬성하는 결과가 나왔다.

자율투표 제도 실시 이래 최고 투표율(51%)을 기록한 이 국민투표 결과는 사회적 폭발의 이중적 의미를 추인했다. 한편으로는 신헌법 제정 찬성을 통해 전횡과 불공정에 책임이 있는 현 사회경제적 질서를 거부했다는 의미를 띠고 있다. 투표 참여 동기도 대단히 다양하고, ‘찬성’을 찍은 모든 이가 신헌법의 의미에 일

2) 우파의 거부감 때문에 ‘제헌의회’ 대신 ‘개헌회의’라는 명칭을 사용했다(역주).

3) 의무투표(voto obligatorio)는 모든 유권자가 반드시 투표하는 제도가 아니라 투표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이와 대비되는 제도인 자율투표(voto voluntario)는 유권자가 선거인 명부에 자신의 이름을 등록할 것인지 말 것인지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이다. 투표는 선거인 명부에 등록된 사람에 한해 할 수 있다. 칠레는 오랫동안 자율투표 제도를 유지해 왔다(역주).

4) 무소속 후보자가 특정 정당에 가입 없이 정당 명부에 이름을 올릴 수 있었고, 서로 뜻이 맞는 무소속 입후보자들끼리 연합하여 별도의 입후보자 명부를 만들기도 했다(역주).

체감을 느낀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찬성’이 78%나 되었기 때문이다. 또 다른 한편으로, ‘개헌회의’에 압도적 다수가 표를 던진 것은 신헌법 제정을 제도권 정치가 아닌 시민의 과제로 인식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개헌 프로세스는 이로써 사회적 폭발의 정당성에 상응하는 제도적 정당성을 갖추게 되었다.

여름휴가가 끝나고 보건 위기도 한숨 돌린 상황이라 2021년 3월부터 시위가 재점화될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코로나 재유행으로 그 가능성이 무산되고, 개헌 프로세스 일정도 또다시 차질을 빚었다. 광역단체장(gobernador regional), 기초단체장(alcalde), 기초의회 의원(concejal) 선거와 동시에 치러질 개헌회의 의원 투표는 5월 중순, 개헌회의 개회는 7월로 연기되었다(Biblioteca del Congreso Nacional 2021 참조).

2021년 5월 15일과 16일 양일에 걸쳐 드디어 개헌회의 의원 선거가 기초단체장, 기초의회 의원, 광역단체장 선거와 동시에 실시되었다(광역단체장 선거가 기초단체장, 기초의회 의원 선거와 함께 실시된 것은 처음이다). 투표율은 지난 2020년 10월 국민투표에 비해 유의미하게 낮은 41.51%였다.⁵⁾ 기초단체와 광역단체 선거 결과를 여/야, 연임/교체, 우파/좌파 같은 최근 수십 년 동안의 고전적인 패러다임으로 보자면 야권의 승리, 야권 내에서는 중도파-좌파(기독교민주당, 민주주의를 위한 당, 사회당, 급진당 등)의 과반, 좌파(공산당, 여러 정당으로 구성된 ‘광범위한 전선’, 지역·녹색·사회·평등 연맹[FRVS, Federación Regionalista Verde Social e Igualdad])의 의미 있는 약진, 정부와 우파 연합 ‘가자 칠레’(Vamos Chile: 독립민주연합[Unión Demócrata Independiente]과 국민혁신[Renovación Nacional]으로 구성)의 패배, 극우인 공화당(Partido Republicano)의 패배로 요약할 수 있다. 그래서 다음 대선에서 현 야권이 결선 투표에서 분열되는 일이 없는

5)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고하십시오. <https://www.servel.cl/servel-entrega-boletin-final-y-hace-positivo-balance-de-doble-jornada-de-elecciones/>

한 우파 정부의 재집권은 어려울 전망이다.⁶⁾

동일한 견지에서, 즉 고전적인 정치 그룹의 견지에서 개헌회의의 선거 결과를 검토하면, 우파와 정부(가자 칠레' 소속 정당들과 공화당)의 '칠레를 위해 가자'(Vamos por Chile) 명부는 비토권 행사 마지노선인 3분의 1 의석 확보를 목표로 했으나 실패했다(득표율 20.6%, 개헌회의 의석의 23.6%인 37석 획득). 좌파를 대변하는 '존엄성 승인'(Apruebo Dignidad: 공산당과 '광범위한 전선'이 주축이고, 지역·녹색·사회·평등 연맹이 참여) 명부는 개헌회의의 투표에서 18%를 득표하여 28석을 차지했다. 중도파-좌파 연합(기독교민주당, 사회당, 민주주의를 위한 당, 급진당이 주축이며 기타 그룹이 참여)은 일명 '승인 명부'(Lista del Apruebo)를 통해 16%의 득표율로 25석을 획득했다. 이 마지막 명부를 구성하는 주요 중도 정당인 기독교민주당은 1.3%의 득표율로 단지 2석의 개헌회의 의원 확보에 그쳤다(그나마 한 사람만 당원이다). 이는 개헌회의에서 사실상 존재감이 없으리라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민중 명부'(Lista del Pueblo)는 26석을 차지했다. 이리하여 야권 내에서는 좌파가 중도파-좌파 연합보다 다수를 차지했다. 종합해 볼 때, 신헌법을 지지하는 존엄성 승인 명부, 승인 명부, 민중 명부와 무소속이 개헌회의 의석의 58%(96석)를 차지했다. 게다가 정당 명부에는 일부 무소속 후보도 포함되어 있으며, 선주민 대표자도 17명이 선출되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⁷⁾

그러나 다른 세 종류의 선거와 동일한 유권자를 대상으로 하면서도 남녀 동수 선출, 선주민 보장 의석, 무소속 입후보에 용이한 규정, 신헌법 기초를 위한 목적 등을 띠고 155석의 개헌회의 의원을 선출함으로써 칠레 정치사에 유례없는 일이었던 이 선거 결과를 과거와 동일한 정치 패러다임으로 재단할 수는 없다.

6) 실제로 우파는 2021년 대선에서 패했다(역주).

7) 최종 선거결과는 다음을 참고하십시오. <https://www.servel.cl/resultados-definitivos-elecciones-de-convencionales-constituyentes-gobernadores-regionales-alcaldes-y-concejales/>

남녀 동수와 선주민 의석 보장처럼 이미 결정되어 있었던 사안들을 넘어 가장 의미 깊은 결과는 무소속 당선자 비중(42%), 사회적 폭발과 직접 관계된 여러 사회 부문 후보자들의 당선, 국회와 정부 엘리트의 상대적 동질성을 크게 벗어나는 사회적 다양성(사회경제적 다양성, 직종 다양성, 교육 수준의 다양성), 급진적 변화 요구들이 반영된 새로운 원칙들에 대한 다수 당선자의 찬성 입장 등이다. 이런 의미에서, 개헌회의에 의해 대표되는 사회적 다양성뿐만 아니라 대다수 선출 의원들이 표명하는 변화 의지는 낮은 선거 참여에도 불구하고 정당성을 확고히 해준다(물론 낮은 투표율이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의미는 아니다). 개헌회의 선거 결과는 2019년의 사회적 폭발이 선거를 통해 제도적으로 사실상 반영된 것이고, 2020년 국민투표 결과가 구체화된 것이다. 간단히 말해, 개헌회의의 구성 면면이 현재 국가권력의 구성 면면보다 실제 칠레 현실에 훨씬 더 근접해 있으며, 또한 현재의 정당 스펙트럼에는 존재하지 않는 새로운 세력과 주역들의 등장을 의미한다.

결론적으로 개헌회의의 의원 선거 결과는, 신헌법 내용과 관련해서 볼 때, 새로운 사회질서를 창출할 만한 기층(基層)이 마련된 듯하다(이에 대해서는 뒤에서 언급할 것이다). 또 제도권 정치와 사회 사이의 위기 관계와 관련해서 볼 때, 개헌회의는 거리로 나선 사회와 제도적 통로 사이의 새로운 유형의 합법적 유대를 표상한다. 이 두 가지 측면은 개헌 프로세스가 진행되는 동안 기존 공간들에 비해 특권적 공간인 개헌회의의 자체를 통해, 또 그 과정에서 사회에서 일어날 일들을 통해 칠레의 정치 지형을 재구성할 새로운 정치사회적 주체를 형성해 나가게 될 것이다. 여기서 문제는 기존의 제도권 정치와 그 주역들이 새로운 현실에 부응하는 변신에 어려움을 겪으리라는 점이다. 또한 최근 부상한 새로운 세력과 그 주역들이 미래를 주도할 새로운 원칙들의 유일하고 합법적인 주체로 자처하는 경향이 있어 역시 문제다.

2021년 7월 4일의 역사적인 개헌회의 출범과 그 뒤 며칠간 일어난 일들이 지금까지 이 글에서 언급한 것들을 재확인해준다. 한편으로는, 마푸체 여성과 2019년 10월의 사회적 폭발에 가장 가까운 입장의 정치권 인사가 각각 의장과 부의장으로 선출된 일은 개헌회의의 지배적인 지향점이 무엇인지 보여주고 있으며, 이는 신헌법의 기층이 될 만한 내용들을 보장한다. 다른 한편으로는, 개헌 프로세스가 정당성을 상실한 제도권 정치와 분열된 사회 간의 힘겨루기를 감당해야 하리라는 점이다. 이 두 가지 상황에서 도출되는 결론은 다음과 같다. 개헌회의는 다른 국가 기관들과의 역할 충돌 없이 명시된 특정 과제를 수행하는 것은 물론이고, 그 과정에서 새로운 사회적 주체들을 구성하는 공간이 될 것이며, 개헌회의 자체가 2021년 11월에 선출될 정부와 의회가 우선적으로 염두에 두어야 할 핵심적인 정치 주체가 되리라는 점이다(Figueroa y Jordán 2020; Atria, Salgado y Wilenmann 2020; Bassa 2017).

새 시대

전 세계를 가로지르고 있는 대대적인 시대 교체 현상에 대한 숙고 없이는 칠레의 개헌 프로세스를 이해할 수 없다. 그 현상은 비록 모든 사회에 영향을 미치고 있기는 하지만 각 사회의 특성들이 개입되고 조합되면서 진행 중이다(Garretón 2021a; Touraine 2021; Caderón y Castells 2020). 너무 세세한 기술은 피하되, 이 글의 취지에 맞게 두 가지 점을 짚어보고자 한다. 한편으로는 삶의 방식과 사회 조직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 새로운 과학기술 혁명, 전 지구화된 세계(국가 간에, 또 각 국가의 내부에도 존재하는 뿌리 깊은 불평등으로 찢기고 분열된 세계이지만)에서 정보통신 사회가 각 나라의 산업사회에 스며들고 이를 변화시키는 양상이다. 이 시대 교체는 수평성과 즉각성(inmediatez, 신속성을

뜻하기도 하고 중재의 부재를 의미하기도 한다)을 집단생활의 핵심 면모로 만들고, 지난 2세기 간의 모든 제도의 정당성에 문제를 제기하고, 노동과 생산조직을 철저히 변화시키고, 문화와 정보통신 그리고 소비에 사회 구조의 핵심 역할을 부여함으로써 예전의 사회 주역을 밀어내고 새로운 주역을 만들어낸다.

그러나 이 사회의 주체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이제 정치는 중심축이 아니다. 따라서 집단적 주체는, 페미니즘과 생태주의와 관련된 일부 표현 외에는, 사회의 일반적인 관심사의 담지자 성격을 잃고 그들만의 개별 기획을 사회 전체의 기획과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강력한 개인화 과정에는 긴장이 흐를 수밖에 없다. 타인의 인정에 입각해 구성되는 주체와 개인적인 이해이든 집단적인 이해이든 간에 개인주의와 자기격리성에 입각해 구성되는 주체 사이에 벌어지는 긴장이다. 이 글에서 우리의 관심사는 그 모든 것이 대의민주주의의 아주 심각한 위기로 표현된다는 점이다. 선거를 비롯해 주권재민을 보장하기 위한 방법들을 전통적으로 모색한 제도와 메커니즘의 정당성은 물론, 대의제 자체도 문제 삼기 때문이다.

한편 최근 더욱 악화된 환경위기로 인해⁸⁾ 새로운 삶의 방식, 생산 방식, 자연과의 관계를 생각하고 창출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여성운동의 가부장사회 비판은 우리의 삶과 사회조직에 전 방위적으로 완전히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

자본주의가 당면한 중대 현안들을 극복하게 해줄 경제모델이 아니라는 점은 분명하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여러 방식의 거버넌스 역시 적절해 보이지 않는다(Piketty 2015; Castells 2017). 특히 민주주의 개념을 정치 영역에 국한시키고 사회의 다양한 분야를 품지 않는 것이 문제다.

8)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의 2021 보고서는 지구온난화 악화, 향후 수십 년에 걸쳐 지구에 미칠 돌이킬 수 없는 그 결과에 대해 경고한다.

이 시대 교체가 칠레 사회의 위기와 출구의 면면에 침투하고, 이 면면을 재규정하고 있다고 말할 때, 이는 개헌 프로세스 돌입, 전개, 신헌법의 내용이 어떤 식으로든 이 변화와 상기 지적인 주제들을 표현하고 수용해야 한다는 점을 뜻한다. 교육, 가족,⁹⁾ 노동의 제도적 재규정, 새로운 권리와 자유의 제도적 정비뿐만 아니라, 새로운 사회의 철학적 원칙들 역시 그 대상이다. 일례로, 국민 혹은 시민, 민주주의 그 자체에 대해서는 고전적인 방식으로는 더 이상 설명할 수 없다. 평등과 수평성 원칙들에 내포된 급진성 때문에 시대 교체의 특징들과 칠레 사회의 위기가 뒤섞여 버렸고, 그 때문에 특권과 불공정에 대한 투쟁이 사회생활 전반에 걸쳐 전개될 전망이다.

그렇다고 해서 헌법이 재건 프로세스에 함축된 모든 문제를 담아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재건 프로세스는 헌법을 넘어서는 사회 재구성을 필요로 하는 일이다. 헌법이 앞서 언급한 문제와 새로운 원칙들을 다 해결할 수도 없고, 이들을 헌법에 다 담을 수도 없다. 다만 개헌 과정에서 그 모든 것이 공론화되어야 하고, 헌법 규범은 '새로운 시대정신'의 산물이어야 한다. 역사적으로 볼 때 칠레의 모든 헌법은 당대의 시대정신과 역사적 문제들을 극복하기 위한 원칙들의 확립을 표명했다. 따라서 소위 개헌 과정에 있는 국가 전체와 개헌회의 사이에 꾸준한 대화가 있어야 하며, 이 과제의 수행에 있어 대학 특히 공립 대학들의 특별한 역할도 필요하다.¹⁰⁾

그러나 이 시대 교체에서 코로나 팬데믹¹¹⁾이 지금까지 끼친, 그리고 앞으로도

9) 가족 제도와 관련해서는, 예를 들어 오늘날에는 다양한 가족 형태가 존재하는데도 불구하고 현행 헌법은 단 한 가지 유형의 가족만 언급한다. 권리와 관련해서는, 오늘날 교육권은 양질의 교육을 받을 권리, 정보권은 진실된 정보를 얻을 권리를 말한다. 국가는 이 모든 권리를 보장해야 하며, 그 외에도 지금의 과학기술 혁명과 정보통신, 다양한 지식의 인정 등에서 비롯된 권리들이 추가되어야 한다.

10)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대학들은 이미 이 과제를 수행해 왔다.

11)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라틴아메리카보건기구(OPA)의 상시 업데이트 되는 다

끼치게 될 가속화 효과, 심화 효과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비록 그 원인이 인간과 자연 사이의 균형이 깨지면서 일어난 생물학적 현상, 보건 현상이라 하더라도, 팬데믹은 바이러스 자체의 역학적인 면을 보여준다. 하지만, 바이러스가 진화하는 방식과 결과는 단지 생의학적 문제만이 아니다. 그것을 변질시키는 동시에 그로 인해 교란되는 사회 환경의 영향을 받는 측면이 있다. 그래서 팬데믹의 의미를 생물학적 현상으로 축소할 수 없다. 사실 팬데믹이 촉발한 위기의 규모와 다차원적 상황은 많은 이로 하여금 문명 교체(cambio civilizatorio)를 논하게 했고, 더 일반적인 표현으로는 “이제 우리는 예전처럼 살 수 없다”(Domingues 2020; Svampa 2021)고 지적하게 만들었다.

칠레의 경우, 바이러스로 촉발된 보건 위기는 사회적, 정치적 위기를 악화시켰으며, 동시에 그 출구 과정에도 영향을 미쳤다. 두 가지 위기 상황은 서로 얽혀 있어서 한쪽을 배제하고는 다른 쪽을 이해할 수는 없는 상황을 만들었다. 앞서 언급했듯이, 가령 개헌 프로세스가 팬데믹의 확산 때문에 영향을 받았고, 팬데믹의 추이 역시 제도의 정당성 위기 때문에 영향을 받았다. 이 두 가지는 또한 우리가 언급한 다차원적인 시대 교체의 의미와 관련된 현상들의 영향을 받고 있다.

따라서 우리의 공존 방식에 영향을 끼치는 물론이고, 개헌 프로세스를 중심으로 하는 재건 프로세스에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그 같은 위기가 가져다주는 결과들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 환기 시설, 응급 병상, 특히 백신 관련 대책은

음 사이트를 참조하라. (<https://www.paho.org/es/temas/coronavirus/brote-enfermedad-por-coronavirus-covid-19>); 지리적 발생 상황은 다음을 참조하시오. <https://who.maps.arcgis.com/apps/webappviewer/index.html?id=2203b04c3a5f486685a15482a0d97a87&extent=-17277700,8881%2C-1043174,5225%2C-1770156,5897%2C6979655,9663%2C102100>; 다음 사이트에서는 기술 보고서들도 제공되고 있다. <https://www.paho.org/es/documentos-tecnicos-ops-enfermedad-por-coronavirus-covid-19>; 칠레의 코로나 현황과 관련된 공식 수치는 다음을 참조하시오. <https://www.gob.cl/coronavirus/cifrasoficiales/>.

예외로 하더라도 팬데믹에 대처하는 정부 정책이 과학계나 지자체 또는 시민사회 단체들에게 적절한 자문을 구하지 않고 그저 정통 경제 정책을 따랐다. 그것은 국민 불평등과 취약성을 더욱 증가시키는 정책이었고, 이에 따라 항상 대응이 늦고 충분치 못했다는 일반적인 평가가 존재한다는 점을 기억하자. 정부 정책들은 시민사회와 야권 정당들의 집요한 노력으로 분명 완화되고 개선된 측면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가난하고, 사회경제적인 측면과 젠더 측면에서 더 불평등한 나라라는 결과를 낳았다. 정신건강에 심각한 문제가 있고, 불안정성이 심화되고, 사회적 결속이 실종되고, 지자체들과 특히 의료분야 종사자들을 제외한 정부 층위의 제도들에 대한 정당성 철회가 만연한 나라가 되었다.¹²⁾ 이 모든 것이 향후 도전 과제로 대두되었으며, 무엇보다도 국가 역할의 재정립과 실생활 과의 밀착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지자체에 대한 더 많은 권한 부여, 교육 부문의 심도 깊은 변화, 과학 발전을 위한 새로운 정책, 돌봄 노동에 대한 우선순위 부여 등이 필요한 것이다. 이 정책들을 비롯해 팬데믹으로 말미암은 모든 정책은 칠레의 경우 ‘사회생활 방식의 변화’라는 원칙의 연차록에 대해 생각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개헌 국면과 재건 프로세스의 특징

‘헌법’이라는 용어는 두 가지 용법이 있다. 첫째, 사회가 자신을 구성하는 방식

12) 2020년 11월, 국제노동기구(ILO)는 그해 칠레 GDP가 1980년 이후 유례없이 -4.5%에서 -5.5% 정도 하락할 것으로 내다봤다(https://ilo.org/wcmsp5/groups/public/---americas/---sro-santiago/documents/publication/wcms_761863.pdf). [Acceso 7/08/2021]; 칠레의 경제 통계들도 참조하시오. 칠레중앙은행: <https://www.bcentral.cl/documents/33528/133208/np02082021.pdf/1bb7e5e1-ba01-49d3-2d0f-858917c8f6c5?t=1627864913780>. 팬데믹과 관련 정책에 대한 여론의 평가는 IPSOS의 보고서를 참조하시오(<https://www.ipsos.com/sites/default/files/ct/news/documents/2021-04/node-674051-783186.zip>).

을 말한다. 둘째, 그 구성 방식의 원칙과 규범에 신성함을 부여하는 문건을 말한다. 사회적 폭발과 함께 시작된 “위기의 정세”(Collier y Collier 1991)는 창건 혹은 재건 국면의 표현이기도 하고, 사회 구성의 재정의가 시작되는 국면이기도 하다. 이 구성 재정의 작업은 시간이 많이 소요될 수밖에 없는 재건 프로세스를 진전시킬 수도 있고 좌절시킬 수도 있다. 개헌 국면(Ackerman 1999)이란 헌법이 제정되거나 새로운 사회 질서를 신성하게 하는 본질적인 혹은 근본적인 변화가 이루어지는 순간을 가리킨다. 칠레의 경우 1980년 헌법은 —독재 정부가 정치적으로 강요한 것이기에 사회가 인정한 개헌 국면이라고 할 수 없다— 민주주의 파괴, 모네다 궁 폭격, 인권 침해와 유린, 소위 신자유주의 사회경제적 질서(사회관계의 조직 원칙으로서의 시장, 국가의 부차적 역할, 공적 영역에 대한 민간 영역의 우위를 골자로 한 질서) 창출 등이 제도적으로 투영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Fuentes 2013; Arria 2013).

‘민주주의로의 이행’이라고 이야기되는 독재 종식은 칠레 경우에는, 비록 의미 있는 수정이 이루어졌지만, 다른 나라들과 달리 개헌 국면도 거치지 않았고, 우리가 앞서 지적한 것처럼 물려받은 사회 질서에 대한 재건 프로세스도 아니었다. 민주 정부들에 의한 중요한 부분적인 개헌 역시 완전한 민주주의 확립을 뜻하지 않았다. 국민 주권이 여러 메커니즘에 의해 여전히 제약을 받았기 때문이다(Fuentes 2021; Garretón 2015).

칠레는 지금 비로소 재건의 특징을 띤 개헌 국면을 경험하고 있다. 새로운 사회 질서의 구성과 이를 원칙과 규범들에게 신성함을 부여하는 헌법을 제정한다는 이중의 의미에서이다.

‘재건’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공존의 방식, 발전 모델, 정치 시스템을 재구성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시대 교체의 맥락에서 칠레 역사에 대한 집단적인 깨달음, 이 역사의 재창조와 투영을 구성하는 원칙과 가치들에

입각한 시도라는 점에서 그렇다. 이런 의미에서 역사적 기억과 미래 지평은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문화적 차원에서 볼 때 오늘날 칠레가 직면한 프로세스의 근본적인 요소들이다. 이는 첫째, 우리 사회의 새로운 헌정 질서가 직면하게 될 커다란 역사적 부채 혹은 구조적 문제를 지시한다. 일부 역사적 부채는 세속적인 성격의 문제이다. 선주민 부족들과의 지배—예속 관계는 무엇보다도 다민족 국가(Estado plurinacional)의 공식화가 필수적이며, 이는 국가의 모든 영역을 변화시키고 헌법의 틀 안에 선주민의 영토, 조직, 자기결정권을 담는 일을 함축한다(Bengoa 2000; Pairicán 2014; Millaleo 2021). 가령, 대농장 과두계층 모델이 야기한 다차원적 사회 불평등과 분열이 문제다(Bengoa 2016; Canales 2017; Canales 2018). 이는 독재의 유산인 신자유주의 모델에 아주 다양한 방식으로 잔존해 있기 때문에, 새로운 발전 모델, 인권과 사회권¹³⁾의 수호자이자 보장자로서의 국가의 역할을 생각할 수밖에 없다. 진정한 국가 공동체의 구성에 악영향을 미치고, 중앙과 지방의 관계 재정립 필요성을 야기하는 중앙집권주의 역시 타파해야 한다. 다른 영역들이 지닌 문제들은 이미 지적인 독재의 제도적 유산과 사회경제적 모델에서 비롯된다. 게다가 독재는 심대한 상징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어서, 쿠데타를 비롯해 칠레 역사가 겪은 민주주의와 공화국에 대한 모든 폭거를 단죄할 헌법, 전문(前文)부터 이를 적시할 헌법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 부분을 공식적으로 포함시키지 않는다면, 칠레는 계속해서 분열된 공동체로 남을 것이고, 공동의 기억과 이 기억의 역사적 반영이 없는 소위 말하는 “근본적인 합의”, 다른 용어로는 “헌정적 애국주의”(patriotismo constitucional),¹⁴⁾ 즉 헌법의 원

13) 자유권과 대비되는 의미에서의 사회권이 아니라, 인간의 권리인 인권과 대비되는 사회의 권리를 말한다(역주).

14) ‘근본적 합의’ 개념은 기본적인 원칙과 가치에 대한 합의를 말하며, 존 롤즈의 “중첩적 합의”(overlapping consensus, Rawls 1993)와 유사할 수 있다. “헌정적 애국주의” 개념은 하버마스가 개진했다(Habermas 1990). Ver Garretón(2014).

칙과 규범에 대한 존중도 무망할 것이다.

그러나 재건은 미래 지평도 요하는 일이다. 우리가 지적한 시대 교체의 주요 현안들을 포괄할 지평이고, 그 지평 하에서 페미니즘, 생태주의, 평등과 존엄성, 탈중앙화와 시민 참여 등의 원칙들이 모든 제도 전반에 반영되어야 한다.

이는 두말할 나위 없이 국가와도 관계있다. 예전에 국가는 한 민족의 유일한 정치적 표현으로 간주되었다. 국가를 개별적 이해보다 상위에 있는 존재, 공익의 보장자로 보는 시각도 있었고, 이와 반대로 국가를 특정 계층이나 계급이 다른 계층이나 계급을 지배하기 위한 대리자로 보는 시각도 있었다. 국가를 한 민족의 유일한 표현으로 보는 시각은 사회가 독자적인 영토, 언어, 역사적 기억을 지닌 여러 민족과 부족으로 형성되었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순간 허물어지고, 서로 다른 집단들이 저마다의 다양한 제도를 반영시킬 ‘다민족 국가’라는 비전에 밀릴 수밖에 없다. 또한 국가는 다양한 유형의 지배와 무관할 수 없다. 국가의 제도 안에서 계급 지배를 위시한 많은 지배(젠더, 종족, 지역, 경제 권력 등과 관련된 지배)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가는 각종 유형의 지배 극복을 위해서, 또 국가의 행위가 다양한 영역을 포괄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변화해야 한다. 국가는 또한 발전 모델, 사회 전체의 것인 공공재의 운용, 인권과 사회권의 보호와 장려, 시민권에 입각한 요구들의 보호와 장려¹⁵⁾를 결정하는 특권적 공간이기도 하다. 지속 가능한 성장 및 분배적 성장을 담지할 발전 모델을 천명한다는 것은 헌법에 상응하지 않는 특정 경제 기획을 넘어선다는 것을 의미한다. 가용 자원과 그 분배와 관련된 대원칙, 즉 사회적,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발전의 원칙을 지향하는 모델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인권과 사회권과 관련해서는, 완전한 인권 보장과 장려, 사회권 준수, 안전, 군을 위시한 권력 기관들의

15) 주석 9를 참고하십시오.

문민 통제를 보증할 사회 조직 모델 등을 보장하는 시스템을 창출해야 한다.

이 모든 것은 대의제라는 제도를 강화하고 쇄신하는 것으로 그칠 일이 아니라 민주주의의 재의미화를 요한다. 앞서 지적한 것처럼, 정치적 민주주의가 사회 모든 영역의 심도 깊은 민주화를 견인하게 해야 한다. 다만 현재의 정치 제도들이 불완전하고, ‘대의제’라는 제도 자체가 문제시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변화가 필요하다. 시민의 의사표현 통로는 물론이고, 사회의 여러 영역과 영토의 의사표현 통로가 훨씬 다변화되어야 하고, 사회적 동원의 대체 불가능한 역할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직접 민주주의 메커니즘도 포함시켜야 한다. 그러나 사회적 동원 역시 속의 과정을 대체해서는 안 되면, 마찬가지로 다양화되고 확대되어야 한다.

새로운 사회계약의 토대

재건 프로세스는 —개헌회의는 재건 프로세스에서 사회적 폭발을 하나의 과정으로 승화시키기 위한 중추적이고 독보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새로운 사회경제적, 정치적 질서의 구축을 요한다. 그러나 정치와 사회 간의 새로운 관계도 구축해야 한다.

이미 여러 차례 지적되었듯이, 새로운 사회경제적, 정치적 제도의 구축은 새로운 사회계약을 의미한다. 독재와 1980년 헌법이 강요한 사회계약을 극복할 새로운 계약이 필요하다. 사실 기존 사회계약은 계약으로 볼 수도 없다. 처음에는 폭력적으로 강요하고, 그 뒤에는 그 강요된 사회 질서에 인위적으로 신성함을 부여한 헌법으로 또다시 강요한 사회계약이기 때문이다. 지금이야말로 공화국을 재건할 협약이 필요하다. 우리가 이 글에서 지적한 역사적 부채를 짊어지고, 지금까지 배제되거나 예속된 여성, 선주민 부족, 지역 등 모든 사회 부문을 포괄하

고, 우리가 시대 교체라고 부르는 것에서 비롯된 대원칙들이 반영된 협약이어야 한다.

명백한 것은 이 도전들이 야기한 제 문제를 헌법에 모두 담을 수도 없거니와, 오래 걸릴 수밖에 없는 재건 프로세스의 모든 영역을 다 망라할 수도 없다는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헌 프로세스의 틀에 입각하여 사회 내부에서 그 모든 것을 광범위하게 논의해야 할 것이다. 이 논의들이, 미첼 바첼레트 정부가 조직했거나(Figueroa y Jordán 2021) 사회적 폭발 이후 자체적으로 소집된 주민회의를 통해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져 왔다는 점은 인정해야 한다. 그러나 다양한 학문 기관, 대중매체, 대학(대체로 공립대학), 수많은 영토에서 소집된 의회,¹⁶⁾ 사회단체와 플랫폼 등을 통해서도 이루어졌다.¹⁷⁾

개헌회의의 선거 결과 분석에서 논평했듯이, 이 선거는 근본적인 토대에 대한 다수의 합의를 보장하는 기구 구성을 실질적으로 가능하게 했다. 선주민 부족 인정, 다민족 국가, 남녀 동수 구성, 성적 다양성 인정, 탈중앙화화 로컬 및 지역 권력 강화, 국가 차원의 지속 가능한 환경 모델과 새로운 발전 모델, 국가가 보장하는 자유와 인권과 사회권, 공공 보건과 공공 교육의 시장에 대한 우위, 천연자원에 대한 공적 통제, 대의민주주의의 보완을 위한 시민의 참여, 평등과 연대 등에 대한 합의이다. 이 모든 요소는 새로운 사회적 협약의 내용을 구성하고,

16) 선주민 등이 고유의 땅으로 선언하거나, 이를 인정받은 지역에서 소집된 의회를 가리킴(역주).

17) 여러 사례가 있지만 '부족 재단'(Fundación Tribu)이 칠레대학과 협력하고, 상원, 칠레기초자치단체연합회, 스탠포드대학 속의민주주의 센터의 지원을 얻어 추진한 공적 속의 프로세스(<https://tribu.org/lxs400>)와 '우리는 칠레에 대해 말해야 한다'(Tenemos que hablar de Chile) 구상(<https://www.tenemosquehablardechile.cl/>)을 참조하시오. 개헌 프로세스에 대해서는 수많은 토론 및 정보 플랫폼이 존재하는데, 특히 신헌법 전망대(Observatorio Nueva Constitución, <http://www.observatorionuevaconstitucion.cl/>), 칠레산티아고대학 개헌회의(<https://www.usach.cl/usachconstituyente>), 칠레대학 개헌회의(<https://constituyente.uchile.cl>), 개헌회의 플랫폼(<https://www.chileconvencion.cl/?s=convencion>)을 참조하시오.

프로세스의 정당성을 떠받치는 토대이다.

새로운 사회계약의 기층을 쌓기는 했지만, 실질적인 합의에는 어려움이 따를 것이다. 예전처럼 시민을 대변하는 정당 시스템이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시민사회도 파편화되어 있어서 다양한 정체성 집단, 이해집단, 사회단체가 저마다 자신의 관점이 사회 전체를 위해 유일하게 유효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새로운 사회계약에 반영시키고자 하기 때문이다(Garretón 2020 en De la Fuente y Mlynarz 2020).

정치 공동체의 재구성

이는 정치 공동체의 부재라는 두 번째 차원과 관계가 있다. 새로운 사회적 협약의 주역이 될 이들이 이 부재 때문에 사회 전체의 의사와 상관없이 자신들의 논리와 동력에만 함몰되어 버릴 여지가 있다. 대의 기관들의 정당성 상실, 대의와 중재라는 개념 자체의 정당성 상실, 불평등과 전횡의 경험, 아직 미해결 상태인 역사적 부채, 엘리트 집단에 대한 거부, 비록 새로운 사회경제적 질서의 기본 원칙들에 대한 다수의 합의가 존재하는 것 같아 보여도, 사회적 협약을 도출해야 할 주역들끼리의 상호 인정도, 또한 협약 도출을 위한 공동의 정치 공간도 아직 가시화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보여 준다.

1938년의 인민전선(Frente Popular) 정부 때부터, 서로 힘의 차이가 있을지언정, 농업 과두계층, 다양한 기업 부문, 중산층, 도시 서민층이 합류한 사회적 협약이 정립되어 있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이 협약에서 농민과 도시 빈민은 배제되어 있었지만, 뒤늦게나마 1960년대에 농업개혁과 도시민중 조직화가 진행되면서 합류했다. 인민연합(Unidad Popular) 정부는 농촌과 도시 민중에게 더 많은 권력을 제공하고, 독점적인 경제 권력을 배제하거나 통제함으로써 이 협약을 심

화시키고자 했다. 사회적 협약과 그 변동 사항들은 1938년에서 1973년까지 이르는 동안 정당 시스템을 통해 표현되었다. 그러나 군사독재 시절에 극적으로 되돌려졌다. 군부의 지원을 등에 업은 지배 계층이 사회 모든 영역에서 절대적인 우위를 확보했다. 앞서 지적한 대로 독재 종식은 1988년 국민투표에서 표출된 정치 체제에 대한 합의일 뿐이다. 사회경제적 질서와 관련된 진정한 합의 혹은 협약이 결코 아니었다. 설사 정치 세력끼리 부분적인 동의 혹은 합의가 있었다 해도, 이들은 사회의 고전적인 주역과 신흥 주역을 대표할 역량을 점점 상실해 왔다. 오늘날의 커다란 문제는 상기 언급한 기층을 구성하는 원칙들에 입각한 새로운 사회적 협약을 전반적으로 해석하고 대표할 수 있는 인사들이 없어 보인다는 점이다. 이 합의가 개헌 프로세스를 통해 정립될 수는 있겠지만, 장차 실천되어야 하는 일이라는 점 역시 커다란 문제이다. 즉, 숙의와 참여를 통한 개헌 프로세스를 거쳐 의미 있는 다수가 승인한 헌법을 도출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가까운 미래에 정부, 의회, 새로운 대의 정치 형식, 사회의 참여적 심급들이 헌법을 실천에 옮겨 그 사회적 협약을 구체화시켜야 한다는 뜻이다.

1925년 헌법이 1938년부터 비로소 새로운 사회경제적 질서의 구축을 뒷받침할 정치 시스템으로 가시화되었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현재 상황으로는 2021년 11월의 대선 및 총선이 개헌 프로세스가 합의한 사안들의 향후 실현을 위해 매우 중요할 것이다.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사회의 기획이 부재하는 가운데 정치 공동체가 해체되어 지금까지 겪은 위기보다 더 심대한 위기로 치달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2021년 11월 대선을 겨냥하여 결성된 우파의 ‘가자 칠레’와 좌파의 ‘존엄성 승인’의 예비선거에는 역사상 최대 인원이 참여하였고, 세대 관점에서 보자면 선거 구조가 변하였고, 개헌회의 선거에서는 좌파의 의미 있는 승리와 중도파-좌파 연합(예전의 콘세르타시온)의 부재가 두드러진다. 이 현상들은 정치와 사회 간의

관계에서 새로운 형식의 표출인 개헌회의 선거 결과를 비준하는 듯하다. 정당들이 주도하지 못하고 사회의 동원과 요구에 응당한 것뿐이기 때문이다(Garretón 2021). 그러나 한 부문이 일시적으로 선거에서 정치적 다수를 차지하는 것만으로는 불충분하다. 정부에서 혹은 의회 내 협의를 통해 안정적인 다수를 차지하여 기본적인 합의에 동의한 세력들을 끌어들이는 역량을 발휘하지 못하면, 정치는 물론이고 정치와 사회의 관계도 더 해체될 것이다. 또한 아무리 광범위하고 견고한 동의 내지 합의가 이루어진다 해도, 사회적 주역들과 함께 하지 않고 사회에서 유리된 정당 정치 시스템 테두리 안에만 머물면 그 역시 대단히 불충분할 것이다.

그래서 정치 공동체의 재건은 개헌 프로세스가 핵심 역할을 수행하는 두 가지 차원을 지니고 있다. 한편으로는 새로운 사회 질서의 구축과 관련된 현재와 미래의 갈라진 구도를 대변할 정당 시스템을 재구성할 공간이 필요하다. 다만 사회와 정치의 새로운 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공간이 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결론

오늘날 전 세계 모든 사회가 자신의 구성 토대가 흔들리는 것을 일정 부분 목도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사회만이 재건 프로세스라는 응답이 강요될 정도의 파산 과정을 겪고 있다. 그리고 이 일부 사회 중 극소수의 사회만이 재건 국면이라는 기회를 맞이하고 있다. 칠레가 그런 경우이다. 바로 개헌 프로세스가 그 기회로, 시대 교체의 도전들을 직면하고 정치 공동체를 재구축하기 위해 긴 역사가 남긴 부채, 또한 최근 수십 년 동안의 모델이 남긴 부채를 극복하면서 사회 전체가 자신의 구성 상황을 다시 생각하고 결정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기나긴 궤적에 뿌리를 둔 새로운 역사 주기, 지금은 근본적인 원칙들에 대한 다수의

합의라는 견고한 토대를 지니게 된 새로운 역사 주기가 시작되고 있다. 그러나 그 길은 아무 문제가 없고, 아무 도전 과제가 없는 길이 아니다. 현재의 사회경제적 모델 및 헌법과 일체감을 느끼는 세력들만 문제이고 도전 대상인 것이 아니다. 사회적 폭발을 야기하고, 원칙들의 기층을 일부 세력이 아닌 모든 세력이 공감할 수 있는 공식으로 변화시키려는 개헌 프로세스에 대한 동의를 도출한 사회 세력과 정치 세력들이 지닌 문제들도 만만치 않다. 프로세스 자체가 재건 국면을 위한 기회요, 정치와 사회 간의 새로운 관계들을 설정해 나가기 위한 기회라지만, 그것은 현재의 정치적 틀 안에서 정부와 확실한 다수파가 있는 국회 사이의 협력을 통해 표출되어야 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러면서 신헌법의 실천, 나아가 경제 회복과 대대적인 사회적 위기(팬데믹과 정부의 거의 모든 면에서 잘못된 정책이 빚은 위기) 극복에 나서야 한다.

첫 한 달 간의 개헌회의 활동이 주요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방식을 보면, 그 모든 것이 달성되리라는 근거 있는 희망들이 존재한다. 개헌회의의 주역들 사이에서는 이 기회를 놓치면 점차 정당성을 상실하리라는 인식이 우세하다. 이미 정당성을 상실했으면서도 현 상태를 유지하려고 애쓰는 보수 세력들에 의해서가 아니라, 2019년 10월의 사회적 폭발 덕분에 그때부터 신헌법이라는 도전 과제를 기꺼이 수용한 세력들에 의해서 말이다.

신찬용/우석균 옮김

| 참고 문헌 |

- Ackerman, Bruce(1999), *La política del diálogo liberal*, Barcelona: Gedisa.
- Alé, S., K. Duarte y D. Miranda(2021), *Saltar el torniquete. Reflexiones desde las juventudes de octubre*, Santiago: Fondo de Cultura Económica.
- Araujo, K.(ed.)(2019), *Hilos tensados. Para leer el octubre chileno*, Santiago: Editorial Usach.
- Atria, F.(2013), *La Constitución tramposa*, Santiago: LOM Ediciones.
- Atria, F., C. Salgado y X. Wilenmann(2020), *El proceso constituyente en 138 preguntas y respuestas*, Santiago: LOM Ediciones.
- Bassa, J.(ed.)(2017), *Proceso constituyente en Chile. Desafíos para una nueva Constitución*, Santiago: Thomson Reuters.
- Bengoa, J.(2000), *Historia del pueblo mapuche (siglo XIX y XX)*, Santiago: LOM Ediciones.
- _____(2016), *Historia rural de Chile central. Tomo II: Crisis y ruptura del poder hacendal*, Santiago: LOM Ediciones.
- Biblioteca del Congreso Nacional(2019), “Acuerdo por la Paz Nacional y la Nueva Constitución”, https://obtienearchivo.bcn.cl/obtienearchivo?id=documentos/10221.1/76280/1/Acuerdo_por_la_Paz.pdf.
- _____(2021), “Ley que posterga las próximas elecciones municipales, de gobernadores regionales y de convencionales constituyentes por motivos del Covid-19”, <https://www.bcn.cl/leychile/navegar?idNorma=1157863>.
- Calderón, F. y M. Castells(2020), *La nueva América Latina*, México D. F.: Fondo de Cultura Económica.
- Canales, M.(2017), “Historia rural de Chile”, texto leído para la presentación del libro *Historia rural de Chile* de José Bengoa, *Revista Carcaj*, <http://carcaj.cl/historia-rural-de-chile-2/>.
- _____(2018), “Sobre el origen del clasismo, el racismo y el autoritarismo chileno: las bases intactas del orden social que quiso remover la reforma agraria”, en M. Canales, J. Razeto y R. Valenzuela(eds.), *Casta y sumisión. Chile a 50 años de la Reforma Agraria*, Santiago: Social-Ediciones.

- Castells, M.(2017), *Ruptura. La crisis de la democracia liberal*, Madrid: Alianza Editorial.
- Collier, Ruth y David Collier(1991), *Shaping the Political Arena. Critical Junctures, the Labor Movement, and Regime Dynamics in Latin America*,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De la Fuente, G. y D. Mlynarz(2020), *El pueblo en movimiento. Del malestar al estallido*, Santiago: Catalonia.
- Domingues, Jose Mauricio(2020), "From Global Risk to Global Threat: State Capabilities and Modernity in Times of Coronavirus", *Current Sociology*, <https://doi.org/10.1177/0011392120963369>.
- Figueroa, P. y T. Jordán(eds.)(2020), *7 propuestas para la nueva Constitución de Chile*, Santiago: Editorial Usach.
- Fuentes, C.(2013), *El Fraude. El plebiscito de la Constitución de 1980*, Santiago: Hueders.
- _____(2021), *La transición inacabada. El proceso político chileno (1990–2020)*, Santiago: Catalonia.
- Garretón, M. A.(2012), *Neoliberalismo corregido y progresismo limitado: los gobiernos de la Concertación en Chile 1990-2010*, Santiago/Buenos Aires: Editorial Arcis/Clacso, Colección Pensar América Latina.
- _____(2014), "La ruptura entre política y sociedad. Una introducción", en M. A. Garretón(ed.), *La gran ruptura. Institucionalidad política y actores sociales en el Chile del siglo XXI*, Santiago: LOM Ediciones.
- _____(2014), *Las ciencias sociales en la trama de Chile y América Latina. Estudios sobre transformaciones sociopolíticas y movimiento social*, Santiago: LOM Ediciones.
- _____(coord.)(2021), *Política y movimientos sociales en Chile: antecedentes y proyecciones del estallido social de octubre 2019*, Santiago: LOM Ediciones/Fundación Friedrich Ebert–Chile.
- _____(2021a), "Por qué el proceso constituyente es refundacional", *Revista Mensaje*, Vol. 70, No. 696, pp. 38–41.
- Habermas, J.(1990), *Ecrits Politiques*, Paris: Editions du Cerf.
- Mayol, A.(2019), *Big bang. Estallido social 2019*, Santiago: Catalonia.
- Millaleo, S.(2021), "Estrategias indígenas en las luchas territoriales: los accidentados caminos de los pueblos indígenas junto a las izquierdas chilenas", en M. A. Garretón(coord.), *Política y movimientos sociales en Chile. Antecedentes y proyecciones del estallido social de octubre 2019*, Santiago: LOM Ediciones.

Pairicán, F.(2014), *Malón. La rebelión del movimiento mapuche. 1990-2013*, Santiago: Pehuén Editores.

Piketty, T.(2015), *Crisis del capital en el siglo XXI*, Buenos Aires: Siglo XXI Editores.

Rawls, J.(1993), *Political Liberalism*,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Ruiz Encina, C.(2020), *Octubre Chileno. La irrupción de un nuevo pueblo*, Santiago: Taurus.

Svampa, M.(2021), “La pandemia desde América Latina: nueve tesis para un balance provisorio”, *Nueva Sociedad*, No. 291, pp. 80–100.

Touraine, A.(2021), *La société de communication et ses acteurs*, Paris: Seuil.